

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방안

# 산란계 축산단체장 거출 법률개정안 제출

— 배합사료 제조업체 수납기관 지정 차선책 —

1990년대 초 축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본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자조금사업이 전 축종으로 확산되면서 한우, 양돈, 낙농 등에서는 이미 의무자조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계자조금사업도 이미 대의원총회를 통해 거출이 확정되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이미 축산물의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납기관의 위탁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으며, 강제조항 또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농협 및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이며, 이 법안이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추진해온 본회에서는 9개의 배합사료 업체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결국 원점으로 기수를 돌려야 했다. 따라서 산란계 축산단체장이 직접 거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축

산단체장에게 산란계업자들의 사료판매실적을 매월 제출토록하고,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산란계업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계란을 취급하는 최종 유통단계가 없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수납기관을 위탁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사료업계에서는 타축종이 도축장 등에서 실시하는 점, OEM사료 대리점 등 중간유통점의 난립, 외상판매로 인한 정산시기 불일치, 농가 부도시 거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거출의 어려움을 표명했지만 본회에서 조사한 결과 중간유통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자금거출시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본회에서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방문하는가 하면, 위원회 소속된 각 의원들을 개별접촉하면서 법률개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어 채란인 및 관련 업계에서도 산란계의무자조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 **양계**